

# 광주·전남 대통합 ‘명운’ 걸렸는데…시·도의회, 명칭·자리 싸움

특별법 앞두고 특별시 명칭 신경전  
시의회, 추진기구 의회몫 자리 요구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시·도의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을 위해 광주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심사를 보류했고, 전남도의회는 뒤늦게 통합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 및 공무원 정원 증원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통합의회를 고려한 인력 보강 논의가 빠졌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통합의회의 인력이 빠졌다는 것이다.

의회는 집행부 일부를 의회 몫으로 전환하되, 의회사무처 4급(서기관) 직급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가 확답하지 않자 ‘보류’카드를 꺼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수정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광주시의원 3명은 21일 열리는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조찬 모임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통합의회 출범 시 광주 지역구 의원 정수 확대, 통합의회 사무처 직급 강화, 정부부시장 1명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 권한 신설 등이다.

전남도의회도 양 시·도가 마련한 통합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집행부와 의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은 행정 구역 통합이라는 가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역사·경제·상징성을 함께 담아내는 문제”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전남광주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제안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 시·도는 광주전남특별시로 합의한 상태다.

김 의장은 “전라도의 역사성과 전남·광주의 통합의 균형을 고려할 때, 명칭에 대한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칭 문제 역시 도민 공감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 광주시가 전남도를 상위 지방정부로 둔 역사가 있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발의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남도의회는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통합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청사 등 민감한 사항을 다루기로 했는데, 앞서 광주시의회가 지난 13일 TF를 구성한 데 반해, 전남도의 TF 구성 계획은 비교적 늦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의 적극적인 설명이나 소통의 부재에도, 전남도의 운명이 걸린 초대형 이슈와 관련해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닌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광주시의회가 추진하는 시의회 의원 정수도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의회 대응 TF’를 꾸리고 통합의회 출범 시 광주 지역구 의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선 통합 시 지역구 의원 ‘광주 20명 대 전남 55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성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관찰해야 할 사안을 정리해 전남도의회 등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의 문제 제기가 자치권을 둘러싼 밧고로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중차대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비판과 견제 기능을 외면한 채 무조건 통합에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도의원 수가 비교적 많고, 관할 범위도 넓은 터라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부족했을 수 있다. 특히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인만큼 집행부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함께했어야 필요가 있었다”며 “다만, 가만히 앉아 불러주기만 바라 도의원들의 태도도 궁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김한중 장성군수 등 도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매권>

## 전남도, 시·군·구 연고산업 협업프로젝트 2년 연속 전국 최다

화순 바이오·해남 조선·완도 수산양식업·신안 신소득작물 선정

전남도가 20일 “2026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 공모에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이하 협업프로젝트)는 지역 연고산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의 정책 수단을 연계해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화순(바이오산업), 해남(뿌리·조선산업), 완도(수산양식업), 신안(신소득작물) 등 4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해 완도 ICTBT 융복합 다

시마 명품화사업, 화순 천연염색 신소재 R&D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품질 타월사업, 구례 산수유와 지리산권 약용 자원을 활용한 행복생활권 전통산업육성사업 등 3개 과제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 협업프로젝트에 선정된 4개 시군에는 2년간 국비 58억원이 지원되며, 총 8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협업프로젝트에 선정된 각 시군 내 연고사업에 중사중인 중소기업은 신청을 통해 시제품 제작·마케팅·판로 개척 등 사업과 지원, 패키지 지원, 생산성 향상,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에 대해 2년간 연 최대 9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와 올해 공모를 앞두고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통합 워크숍, 시군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어 과제 발굴과 예비선정 지원, 과제기획 고도화 등을 준비했다.

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2년 연속 전국 최다 과제 선정은 전남의 품뿌리 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에 대한 도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군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협업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지역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곡성 육용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확산 차단 총력

전남에서 또다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환원이 검출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곡성 검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환원이 검출돼 오리 2만7000여마리가 살처분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전남도는 환원 검출 직후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취했다. AI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다른 가금농장과 농장방문객 및 방문차량을 대상으로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이어 발생농장이 오리를 납품하는 회사와 관련 된 또다른 농장과 전남도 내 오리농장, 관련 축산

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정오까지 일시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다.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에서 36건이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나주와 영암에서 7건이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파로 소독시설 동파 등 방역 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인 만큼 농가 자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온이 비교적 높은 낮 시간대를 활용해 농장 안팎을 집중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교육감 출마 후보 3인, 광주·전남 교육통합 줄속 추진 반대

“행정통합은 공감...교육 주체 목소리 반영, 준비 없는 속도전 안돼”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오경미·정성홍 후보가 광주·전남 교육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과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 시민공천위원회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국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숙의와 준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교육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하

다”고 밝혔다. 시민공천위원회는 이들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구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속물이 아니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행정 편의나 정치 일정에 따라 거러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통합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교육공무원노조,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실질

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교원 인사 체계 혼선과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 생활권 붕괴 등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광주와 전남 교육감의 행보와 관련, “교육의 본질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 가치보다 정치적 유희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깊이 우려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용봉탕·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6년 01월 19일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및 동의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6년 03월 23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21일

주식회사 동양테크윈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76, 107(상가1동)동 지하1층 103호(10호) (주월동, 주월동이지터원아파트1단지) 청산인 정영현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6년 01월 19일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및 동의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6년 03월 23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21일

주식회사 동양하우텍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76, 107(상가1동)동 지하1층 103호(10호) (주월동, 주월동이지터원아파트1단지) 청산인 정영현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